

‘쓰레기 연료화 시설’ 손실보상 놓고 나주 vs 광주 ‘갈등 격화’

광주권 SRF 나주 반입 놓고 양 지자체 사실관계 난타전

혁신도시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가동문제 놓고 3년간 갈등

고형연료 반입의 부당성·주민수용성 조사 미흡 등 주장

전남 나주시가 ‘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 광주시를 향해 ‘광주권 생활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 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광주시가 사실관계를 놓고 반박하자 제반박에 나섰다.

이 발전소는 1일 400t에 달하는 광주권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 반입의 부당성과 주민수용성 조사 미흡 등을 주장하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동 문제를 놓고 3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 방식을 액화천연가스(LNG) 100%로 전환하고, 기존 광주권 연료화 시설인 정정빛고을(㈜) 사업장을 비롯해 SRF 발전시설과 부속 시설을 매물 처리할 경우 손실보상액으로 9000여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지난 13일 광주시가 밝힌 ‘광주권

SRF 나주 반입 사실관계 설명자료 입장문’에 대해 14일 제반박 입장문을 냈다.

나주시는 “광주시가 문제해결 노력보다는 자신들이 주주로 사업에 참여해 준공한 정정빛고을(㈜)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연료 반입 거부로 사업장이 가동을 못할 경우 법적인 수단을 강구한다는 매우 강압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나주시는 이러한 광주시의 접근자세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참여 주체 간 의견차이로 난항 중인 손실보전 범위에 ‘광주SRF 생산시설을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특히 “정정빛고을(㈜) 손실문제는 광주 내에

서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고 이웃 도시로 떠넘기려는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과 난방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로 주요 주주인 광주시와 난방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초 합의 사항에 따라 광주 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직접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나주시의 이러한 주장은 2009년 3월 환경부와 난방공사, 나주시 등 전남 6개 지자체가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한다.

당시 합의서에 따르면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전남지역(나주·목포·순천)에서 생산한 SRF만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광주시는 협약 대상 지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합의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시가 이후 2011년부터 광주SRF를 나주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1년 9월 27일 광주시의 회 본회의에서 광주시 환경생태국장과 모시 의원 간 질의응답이 담긴 회의록(속기록)을 제시했다.

당시 환경생태국장 신 모씨는 “우리시(광주시)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고형연료(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든 성형 RDF) 발전시설 운영으로 행여 지역주민들께 건강상의 위해 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공개 발언했다.

신 전 국장은 이어 “(이러한 염려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난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발전(소각)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고형연료)생산시설만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신 전국장의 발언 내용 중 가장 이기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속기록 내용은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인근 나주의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의 환경오염 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다.

해당 발언에 대해 모 시의원은 “신 국장이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면 광주광역시 공무원이냐 광주 시민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안보면 되고 인근에 나주혁신도시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되물기도 했다.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논란이 일자 해당 속기록이 지역사회에 공개됐고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나주 지역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나주시는 2013년 10월 15일 광주시 간부공무원의 사과 요구와 함께 ‘광주SRF는 사전 협의·협의를 없는 사항으로 반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광주시에 발송했다.

문제는 신 전 국장의 계획대로 광주시는 이후 지난 2014년 6월 난방공사 등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2018년 6월 광주 남구 양곡동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 소각로와 발전시설을 제외한 ‘정정빛고을(㈜)’라는 SRF(생활쓰레기 고형폐기물 연료) 생산시설만 준공하게 된다.

이 법인사업장은 광주시(25%), 한국지역난방공사(16.6%), 포스코건설(5.6%), KB광주SRF시설사모특별자산투자(49.1%)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나주시는 “광주시는 당시 나주시가 보낸 ‘광주SRF 반입 반대’ 공문을 통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SRF수요처에 문제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SRF 연료화 시설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신봉우기자

전남 테크노파크 노조 “채무 불이행한 유 원장 임기 연장 절대 반대한다”

직원 74% “기관장 자격 부적절”

“개인 부채가 많아 기관이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기관장의 업무 수행이 적절할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산학연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남테크노파크가 원장의 개인 빚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으로 직원은 150여명, 한해 예산은 1000여억 원 규모다.

직원들은 “원장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우리 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10여건의 공모 사업에 탈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며 “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과제 공모를 준비했던 지역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등에게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4월 전남테크노파크가 신청한 사업과 관련해 ‘대표자 채무불이행으로 제외한다’고 통보하는 일도 발생했다.

같은달 산업부에 104억 규모의 전략혁신



공공연구노조 테크노파크 조합원들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 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소재자립화기술개발을 신청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사전지원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는 것.

직원들은 “이같이 탈락한 경우는 100억원 이상 산업부 과제만 3건이고, 신청조차 못하게 막은 사업들과 사전에 인지하고 신청하

지 않은 과제들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크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자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유 원장에 대한 적합여부 투표결과 73.3%가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병근 전남테크노파크 연구노조 지부장

은 “비영리공공기관에서 중앙정부과제를 신청하면서 사전제외 대상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천억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기관장 업무를 단순히 원장 개인 일로 덮고 넘어갈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 원장은 2018년 10월 21일 2년 임기로 취임해 오는 21일 만료지만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달 열린 이사회 결과 임기연장에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 전남도의 승인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절차만 남았다.

참석한 이사들은 “원장의 채무불이행은 개인적인 문제로 노동조합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원장 임기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원장 채용 당시 규정을 검토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조합원 30여명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있는 대전정부청사에서 유 원장의 임기연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에서 벗어난 연임이 인정 될 경우 공공연구노조는 강렬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광주·전남 추석기간 농축산물 부정유통 45곳 적발

도·소매상 등 1039개소 대상

외국산 밀가루를 이용해 한과를 만드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추석연휴 농축산물 부정유통 업체 45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기간 농축산물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해 45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의 한 한과업체는 외국산 밀가루로 만든 약과를 유과, 산자, 편강, 약과 등 한과세트에 포장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뒤 2.1kg, 96만원을 부정유통했다.

광주의 한 떡집은 외국산 쌀로 만든 떡 10kg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단속 업체 중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74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